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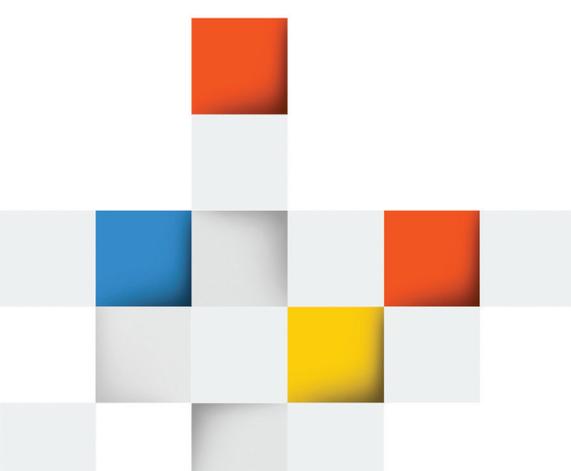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 소득·자산의 분포 추이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성명재 (홍익대학교)

-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금융자산이 10% 남짓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자산으로 구성된다.
-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에 대응하여 재산세를 강화하여 분배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 그러나 재산세는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어 오히려 분배격차를 소폭 확대시킨다.
- 이는 소득과 (부동산)자산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자산배율이 소득배율보다 작기 때문이다.
- 소득과 자산의 분포 특성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산세의 효과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는 1990년대 말에 발생하였던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그리고 더디지만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정지운·임병인, 2020).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면서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분배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수년간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나 정책담당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들이 분석한 실증연구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산세를 과세하더라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거나(김한기·박기백, 2020), 반대로 소득분배격차를 확대시킨다는(성명재·김현숙, 2006; 박명호 2011, 2019; 성명재, 2022)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재산세가 어떤 방향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소득과 자산 분포구조의 특성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소득 및 자산분배구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재정패널조사」에서 재산세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이다. 분석대상기간은

2013년부터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한다.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던 기간은 2010년대 말부터 2021년이다. 이 글에서 분석한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던 시기와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자산변동과 함께 재산세 과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등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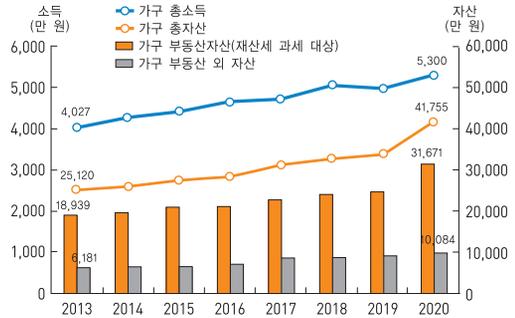
### 소득 및 자산의 추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4,027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31.6%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보유자산액은 가구당 평균 2억 5,120만 원에서 4억 1,755억 원으로 66.2% 증가하였다(그림 VI-15). 특히 2010년대 말부터 보유자산액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소득보다 자산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0년대 말부터 2021년까지 주택, 토지, 건물을 비롯하여 부동산 자산의 가격과 전월세가격 등이 폭등한 영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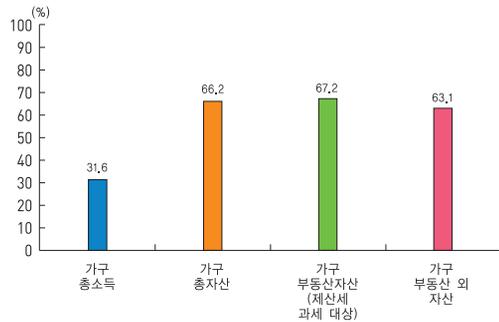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자산, 임차한 주택이나 건물, 상가, 토지 등에 불입한 전월세보증금, 회원권, 기타 자산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자산(주택, 토지, 건물)의 가구당 평균 보유액은 2013년 1억 8,939만 원에서 2020년 3억 1,671만 원으로 67.2% 증가하였다.

[그림 VI-15] 가구 소득 및 자산의 변화, 2013-2020

#### 1) 총소득 및 총자산



#### 2) 2013년 대비 2020년 증감률



주: 1)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소득분위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소득과 자산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계층별 자산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가구를 재배열하고 전체 가구를 10%씩 분할하여 10개의 소득분위(income deciles)로 소득계층을 구분하였다.

오름차순으로 가구를 재배열하였기 때문에 저소득분위(1분위)에서 고소득분위(10분위)로 옴



겨갈수록 평균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분포를 보인다. [그림 VI-16]에서 보듯이 2020년 현재 10분위의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1억 5,465만 원으로 1분위(681만 원)의 22.7배에 이른다. 자산의 경우에는 10분위의 평균 자산보유액이 9억 8,824만 원으로 1분위(1억 9,018만 원)의 5.2배로 소득에 비해 격차가 상당히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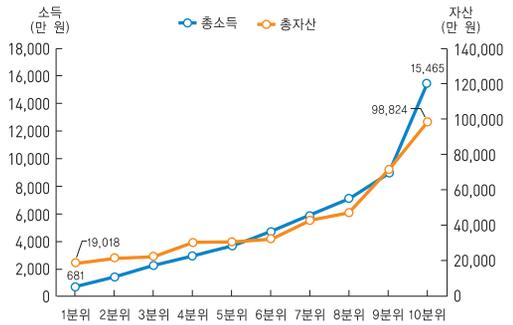
소득 10분위와 1분위의 소득과 보유자산액의 상대비율을 기준으로 상대적 분배격차를 나타내면, 자산보다 소득의 상대격차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별 자산격차가 소득격차보다 작은 것은 생애를 통틀어 왕성하게 소득을 획득하는 연령대와 자산축적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연령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수록 높아진다. 주로 청년기와 중·장년기에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만큼 젊은 연령대에서 소득수준이 높다. 자산은 기본적으로 저축을 통해 축적된다. 장년기와 노년기 연령대는 젊은 연령대보다 생산성이 낮고 퇴직·은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득수준도 낮아진다. 비록 소득수준이 작아지더라도 은퇴하기 직전까지 저축을 통해 자산은 계속 축적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생애 중 은퇴 시점에 즈음하여 자산액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노년층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는 저소득분위에 속하지만 자산 기준으로는 중간 또는 높은 분위에 속하는 가구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생애 동

안 소득흐름과 자산축적흐름 사이의 연령적 차이로 인해 소득계층간 상대자산격차는 상대소득 격차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VI-16] 소득분위별 소득 및 자산 분포, 2020



주: 1) 소득분위는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10개의 소득계층을 구분한 것으로서 1분위가 최저소득층, 10분위가 최고소득층임.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4차년도)」, 원자료, 2022.

[그림 VI-17]은 2020년 현재 소득분위별 소득, 자산, 부채의 보유구조를 보여준다<sup>1)</sup>. 논의의 편의상 절대액 대신 분위별 세부 항목의 구성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시장소득, 그리고 각종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소득분위별로 소득의 절대수준도 차이가 크지만, 총소득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 구성비중 차이도 상당히 크다. 저소득분위일수록 이전소득의 비중이 큰 반면, 고소득분위일수록 이전소득 비중이 작아지는 대신 시장소

<sup>1)</sup> 2020년 이전 기간도 2020년과 유사하다.

득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유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큰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VI-17-1). 최근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노인가구는 대부분 은퇴가구이다. 은퇴가구는 대부분 저소득분위에 속해 있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저소득분위는 연금이나 빈곤급여 등 이전소득을 수급하는 노인가구가 늘고 있다. 젊을수록 시장소득 비중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소득구성 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차이와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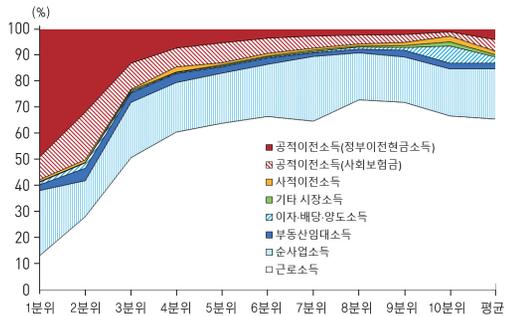
[그림 VI-17-2]는 소득분위별로 세부 자산항목의 구성비율 패턴을 보여준다. 소득의 경우 세부 항목의 구성비율 차이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세부 항목의 보유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부채의 경우에도 소득분위별로 세부 항목의 구성비율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그림 VI-17-3). 소득계층의 구분 없이 자산과 부채의 구성비율이 비슷한데, 이는 가구의 소득구성 패턴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가구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총자산의 2/3(약 60~70%) 정도를 주택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기타 부동산자산(토지, 건물), 전월세보증금, 금융자산의 형태로 각각 10% 정도씩 보유하는 패턴을 보인다. 전월세보증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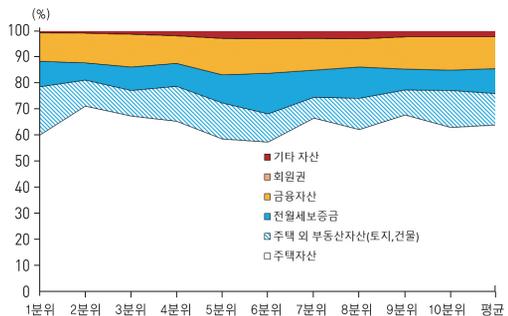
포함하여, 우리나라 가구는 대략 총자산의 90%에 가까운 매우 높은 비율로 부동산과 관련된 자

[그림 VI-17] 소득분위별 소득, 자산 및 부채 구성 분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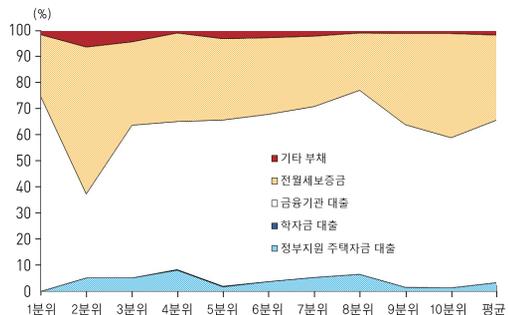
1) 소득구성 분포



2) 자산구성 분포



3) 부채구성 분포



주: 1) 소득분위는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10개의 소득계층을 구분한 것으로서 1분위가 최저소득층, 10분위가 최고소득층임.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4차년도)」, 원자료, 2022.



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보유 비중이 10% 내외로 비중이 상당히 낮다(그림 VI-17-2). 가구의 부채는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2/3)과 전월 세보증금(1/3)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VI-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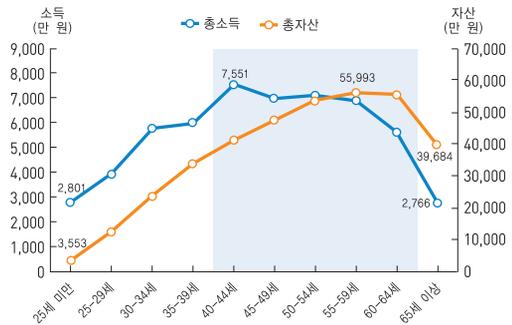
###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연령대별 소득과 보유자산의 분포는 [그림 VI-18]과 같다. 생애주기가설에서 시사하는 바와 유사하게 연령대별 소득분포는 종(鐘)을 거꾸로 엮어놓은 듯이 역U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애주기가설은 일생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은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소득(또는 소비)의 변화추이를 일반화하여 보여주는 경제학 이론 중 하나이다. 청년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중·장년기에 이르러 최고점에 도달하였다가, 장년기에 접어들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노년기에 접어들어 은퇴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그림 VI-18]은 2020년 시점의 분석결과이다. 절대수준만 차이가 있을 뿐 소득과 자산의 전체적인 분포는 다른 해와 대동소이하다.

2020년 현재 20대 초반 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2,801만 원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증가하여 40대 초반에 7,551만 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다음, 50대 후반까지 완만하게 소득이 감소하다가 65세 이상 노년기에 이르러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연령대별 생애자산분포도 생애소득분포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생애자산분포에서 평균 자산액이 정점에 도달하는 연령대는 50대 후반~60대 초반으로 은퇴기 연령대와 일치한다. 40대 후반부터 가구소득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소득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일부 저축을 통해 계속 자산을 축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균수명이 빠르게 연장되면서 노후생존기간이 길어진 만큼 노후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에도 계속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그림 VI-18]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 분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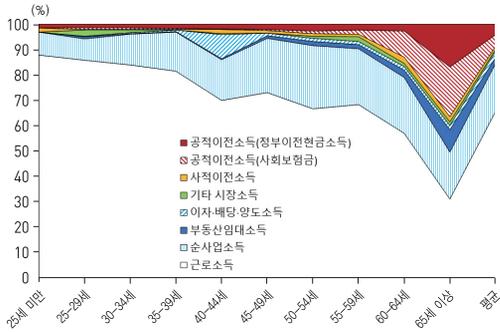


주: 1) 연령대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5세 단위로 구분한 것임.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4차년도)」, 원자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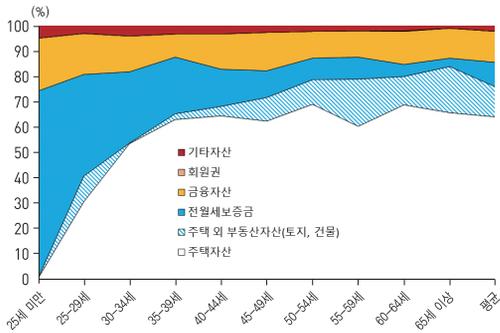
[그림 VI-18]에서 보듯이 소득과 자산 분포는 서로 비슷한 변화 패턴을 보이지만,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에는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는 소득과 자산 분포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상관관계의 강도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I-19] 연령대별 소득, 자산 및 부채 구성 분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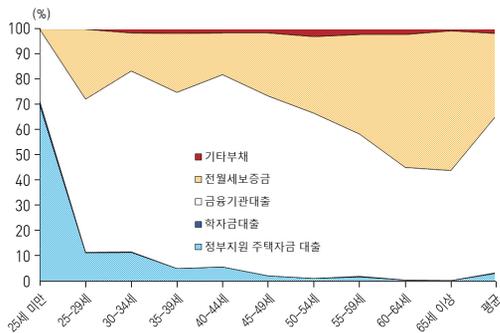
1) 소득구성 분포



2) 자산구성 분포



3) 부채구성 분포



주: 1) 연령대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5세 단위로 구분한 것임.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4차년도)」, 원자료, 2022.

[그림 VI-19]는 각각 연령대별로 가구 총소득과 자산, 부채의 세부 항목별 구성비율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20대~50대의 매우 넓은 연령대에 걸쳐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가구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50대 후반부터는 이전소득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은퇴로 인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자녀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소득보조금과 공적연금 등이 동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30대 이하에서는 임대소득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40대 이상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대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흥미롭다(그림 VI-19-1).

[그림 VI-17-2]에서 보았듯이 가구가 보유한 총 자산 가운데 주택자산은 보유 비중이 60~70%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소득분위별로도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자산구성은 연령대별로 편차가 크다. 20대~30대 초반의 청년기에는 주택을 보유한 자산 비중이 매우 낮고, 주택 등에 대한 전월세(보증금)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주택자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전월세(보증금)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 흥미롭다(그림 VI-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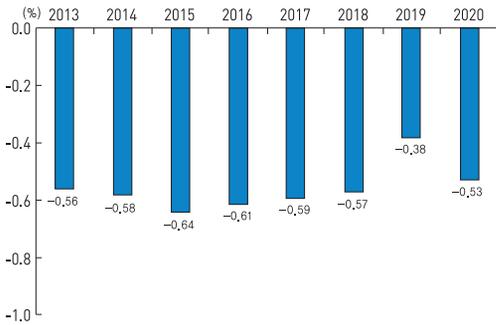
부채의 구성 역시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다. 20대 초반의 청년기 가구에서는 주택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가 주류를 형성하였다가 이후 급속히 비중이 감소한다. 반면에 20대 후반부터는 금융기관 차입(대출)에 의한 부채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수령한 전월세보증금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그림 VI-19-3).



##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그림 VI-20]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준다. 재산세는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 반대이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0.38~-0.64%로 예외 없이 음(-)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크기는 상당히 작다.

[그림 VI-20]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3-2020



주: 1) 소득재분배 효과는 재산세 부과 전·후 소득의 지니계수의 감소율로 측정함. 지니계수가 하락하면 소득재분배 효과의 부호를 (+)로 평가하고, 반대로 상승하면 (-)로 평가함.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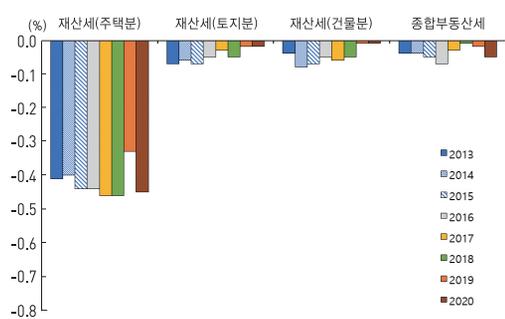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일반 가계가 부담하는 재산세는 크게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그림 VI-21]에서 보듯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네 가지 유형의 재산세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음(-)으로 나타났다. 그 중심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있다. 일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약 2/3로 절대적으로 높다. 주택분 재산세의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도 주택자산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고가주택 등에 한정하여 과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조차, 작지만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양(+)의 소득재분배를 확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 하자는 정책목표와는 사뭇 상반된 결과를 보여 준다. 고가주택의 경우 고소득자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에 속한 비율이 높은 은퇴자 중에도 고가주택 소유자가 많고 이들 중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VI-21] 재산세 유형별 소득재분배 효과, 2013-2020



주: 1) 소득재분배 효과는 재산세 부과 전·후 소득의 지니계수의 감소율로 측정함. 지니계수가 하락하면 소득재분배 효과의 부호를 (+)로 평가하고, 반대로 상승하면 (-)로 평가함.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소득총액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가구의 세금총액에서 개

별가구의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가구에서 서로 같으면, 세금이 소득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분포격차는 동일하다. 이 경우 소득재분배 영향은 0이다. 이런 종류의 세금을 소득비례세라고 한다.

비례세가 아닌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어떠한가? 만약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중에서 더 큰 비율로 세금을 부담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중 더 작은 비율로 세금을 부담하면 세후소득의 상대소득격차는 줄어든다. 이때 소득재분배 효과의 부호는 양(+)이 된다.

반대로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중에서 더 작은 비율로 세금을 부담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중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부담하면 반대로 상대소득격차가 확대된다. 이때 소득재분배 효과의 부호는 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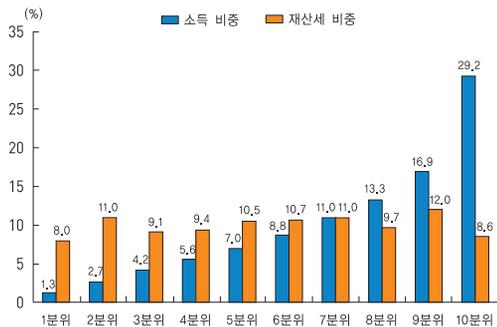
재산세의 세부담 구조는 어떠한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절대액으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그렇지만 소득 중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비율이 저소득층의 경우보다 작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재산세는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막연하게 재산세가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해왔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여서 의외로 여겨질 수 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재산세의 소

득재분배 효과가 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VI-22]를 자세히 살펴보자. [그림 VI-22]는 전체 가구의 소득총액과 재산세총액에서 각 소득계층이 차지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세의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1~6분위의 중·저소득층에서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보다 더 크다. 소득 최하위 10%(1분위) 계층의 경우에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의 6.15배에 이른다. 재

[그림 VI-22] 소득분위별 소득 비중 및 재산세 비중 비교, 2020

1) 소득 비중 및 재산세 비중



2) 소득 비중 대비 재산세 비중



주: 1) 소득 비중은 전체 가구의 소득총액 중 해당 소득분위의 소득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2) 재산세 비중은 전체 가구의 재산세 총액 중 해당 소득분위의 재산세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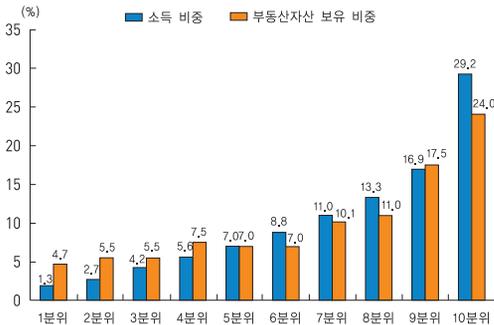
3)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4차년도)」, 원자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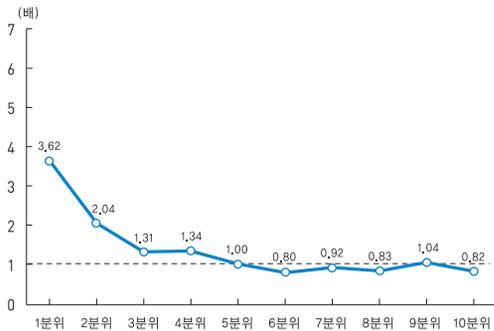
산세의 상대적 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에 8~10분위의 고소득층에서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보다 현저하게 작다. 10분위의 경우에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의 29% 수준(0.29배)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재산세 절대액은 고소득층이 조금 더 크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재산세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기 때문에 재산세는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VI-23] 소득분위별 소득 비중 및 부동산자산 보유 비중 비교, 2020

1) 소득 비중 및 부동산자산 보유 비중



2) 소득 비중 대비 부동산자산 보유 비중



- 주: 1) 소득 비중은 전체 가구의 소득총액 중 해당 소득분위의 소득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2) 부동산자산 보유 비중은 전체 가구의 부동산자산 총액 중 해당 소득분위의 부동산자산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3)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4차년도)」, 원자료, 2022.

소득계층별 재산세 부담구조가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현상은 소득계층별 자산분포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VI-23]에서 보듯이 1~4분위의 저소득분위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자산의 보유 비중이 소득 비중보다 크다.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가구로 구성되어 있다(성명재, 2015). 그런데 [그림 VI-19-2]에서 보듯이 이들 연령대의 부동산자산 보유액은 결코 작지 않다. 1분위의 부동산자산 보유 비중은 소득 비중의 3.62배에 이른다. 6~10분위에서는 반대로 부동산자산 비중이 소득 비중보다 대체로 작다.

정리하면 고연령층일수록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부동산자산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런 연유로 재산세가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맺음말

1990년대 말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세와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국민 삶이 팍팍해지고 아파트를 비롯하여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재산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2021년 말까지 유지되었다.

소득세는 직접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세 사이에 부동산자산이라는 중간매개체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득과 부동산자산의 상대분포, 그리고 부동산자산과 재산세 사이의 상대분포가 각기 끈끈하게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비로소 재산세가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소득분포와 부동산자산 분포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한다. 바로 그런 연유로 인해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성명재, 2022). 이런 결과는 이 글에서 소득계층별 자산분포를 추정된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소득분포 구조와 자산분포 구조가 상당히 느슨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여 고자산가의 재산세를 누적적으로 더 크게 증가시키더라도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성명재, 2022). 그러므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산세는 적절하지 않으며 효과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한기 · 박기백. 202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입법과 정책」, 국회입법조사처, 제12권, 제1호, pp. 117-142.
- 박명호. 2011. 「부동산 보유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보유세의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1-06, 한국조세연구원.
- 박명호. 2019. “2018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예산정책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제8권, 제1호, pp. 101-121.
- 성명재. 2015. “인구 · 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제22권, 제2호, pp. 215-236.
- 성명재. 2022.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 「재정학연구」, 한국재정학회, 제15권, 제2호 (통권 제113호), pp. 93-139.
- 성명재 · 김현숙. 2006.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소득 · 부동산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부담 분포 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6-02, 한국조세연구원.
- 정지운 · 임병인. 2020. “소득불평등의 연령효과와 추이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제68집, 제4호, pp. 93-118.